

인증수련활동에 대한 '중지' 제도 신설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청소년활동 현장의 부담을 덜어준다

추진배경

-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인증활동 운영 어려움으로 행정처분 대상 증가
- 불가항력의 사유임에도 행정처분 시 국가제도에 대한 불만 리스크 발생
- 인증활동을 운영하지 못하고 만료되는 활동 속출로 예산 비효율성 심화

주요성과(BP)

- 인증제 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'중지' 제도 신설로 행정처분 감소
※ 미실시 행정처분 '19년 282건 ⇒ '20년 0건
- 인증활동 운영기관의 인증제도의 코로나19 대비 적극행정 만족도 증가
- 운영이 어려운 인증활동 대상 운영 중지로 예산 효율성 향상(유효기간 유예)
※ 11월 기준 1,023건 중지(재신청 시 심사 비용 약 1억 7천만원 절감)

-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운영하지 못하는 **인증활동**이 속출함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활동 증가

-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 후 1년 이내에 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
- '20년 전반기 인증활동 운영 횟수 및 참여인원이 최근 5개년 전반기 대비 96% 이상 감소
(인증활동 참여인원 '15년 ~ '19년 평균 343,888명 대비 '20년 11,090명)

- 인증수련활동을 1회도 운영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예산 비효율성 및 국가제도에 대한 불만 발생(1년에 1회 이상 미운영 시 유효기간 연장 불가)

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의 입장에 선 적극행정 필요

➡ 인증활동 운영을 '중지'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효기간 만료를 유예

"규정과 전례를 찾으며 행정력을 낭비할 틈 없어..
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필요"
('20.8.18., 정세균 국무총리)

KTV 대한뉴스 월~금요일 19시 30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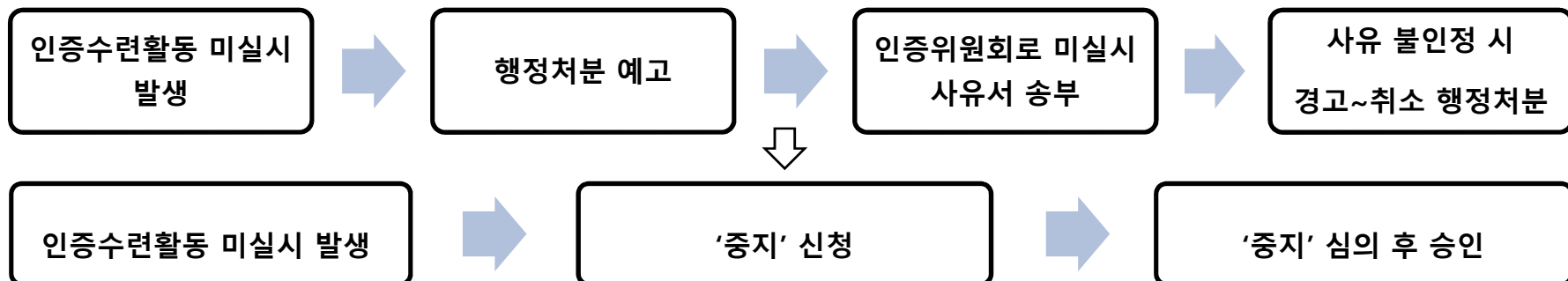
"접시 깨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입장서 적극행정"

회차 : 540회 방송일 : 2020.08.18 재생시간 : 02:27



- 인증활동 '중지' 제도 신설을 위한 주무부처(여성가족부) 협의 및 법적 검토
 - (여성가족부)중지제도 취지 및 필요성 공유, 운영 시 고려사항 등 확인
 - (전문변호사)중지제도 운영 시 필요한 절차 및 법령 위반사항 여부 법적 검토
-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'중지' 제도 신설('20.6.24.)
 -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'중지' 근거 마련
 - 중지 신청자는 중지사유를 작성하고 인증위원회에 제출
 - 중지가 승인될 경우 중지기간 동안 유효기간 연장 및 미 실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

<중지제도 시행 전 · 후 미 실시 인증활동 관리 프로세스 비교>



➤ 문제점

- (운영상 문제) '중지' 제도 신설 시 운영기관이 제도를 왜곡하여 사용 할 위험성 존재
 - * 실제로 운영할 생각이 없으면서 유효기간만을 연장하여 홍보에 사용
- (행정적 문제) 중지 관련 공문이 도달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상 문제 발생
 - * 코로나19로 기관자체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팩스 발송된 공문 수신이 되지 않음
- (적절성 문제) 코로나19로 인한 운영기관의 문제에 대한 '중지' 제도의 실효성 의문

➤ 해결노력

- 왜곡 방지를 위하여 인증활동별 중지신청은 유효기간중 1회, 1년 초과 금지
- 공문발송 시 팩스나 이메일 발송 및 등기우편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문 도달 가능성 확대
- e청소년 제도개선 게시판을 운영하여 운영기관의 요구에 기반한 제도신설
 - * 게시판에 민간 운영기관이 유효기간 검토 등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검토 요구('20.6.12.)

- **코로나19 상황으로 인증활동을 실시하지 못하는 운영기관의 운영문제 해결**
 - 행정처분 문제를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해결 (행정처분 건수 '19년 282건 ⇒ '20년 0건)
 - 인증활동 운영 문제 해결 - 운영기관 전체 748개소 중 222개소 참여(전체 대비 30%)
- **인증활동 '중지' 제도 운영으로 예산 효율성 확보**
 - 6월 ~ 11월말 기준 1,023개 인증활동 중지 신청 및 심의 완료
 - 유효기간 연장 및 신규 심사비 약 170,000,000원 절감(1건당 심사비 약 15~20만원 소요)
- **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즉각 반영으로 국가제도 신뢰성 제고**

“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하는 인증활동에 대한 구제방법 건의에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적극행정에 크게 만족 함”(20.7.6.,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송재인, 인증활동 미실시 컨설팅 중)



중지제도에 대한 지속적 운영 및 관리로 전국의 인증활동 운영기관에 대해 유사 시

대응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